

주간 통일정세

2016-36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
|-----|---|--|
| 정치 | 9.3 | 태영호 망명 후 영국주재 北외교관들 '두문불출'(연합뉴스) |
| | 9.4 | 北 개정헌법, 김일성·김정일 '수령'·'령도자' 호칭 생략(연합뉴스) |
| | | 北, SLBM 발사 관련자 환송에 10만명 동원(연합뉴스) 北, 청년층 충성 촉구...김정은, 청년동맹은 당 다음 조직(연합뉴스) |
| | 9.5 | 북한, 터키 대사에 차견일 임명(연합뉴스) |
| | 9.6 | 北김정은, 핵무력 계속 확대해야...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연합뉴스) |
| | | 北, 김양건 전 통전부장 등에 '조국통일상' 수여(연합뉴스) |
| | | 北, 10년만에 '계획일꾼 열성자회의'...김정은에 '충성맹세'(연합뉴스) |
| | | 北 농근맹 대회 34년 만에 열린다...12월 평양서 개최(연합뉴스) |
| | | 北, '김정은 참관' 노동미사일 발사 사진 9장 공개(연합뉴스) |
| | | 北TV, 미사일 발사영상 하루만에 공개...日 사정권 암시(연합뉴스) |
| | | 北, '애국열사릉'에 유해 4구 새로 안치(연합뉴스) |
| | | 北, 핵억제력 강화 물러서지 않아...빈말 아니다(연합뉴스) |
| | 北매체 "제제가 오히려 강국건설 촉매제 역할" 주장(연합뉴스) 北 매체, 정권수립일 68주년 '떠우기'(연합뉴스) | |
| | 9.7 | 北대남기구 "美침략군 남조선 강점 71년"...반미투쟁 선동(연합뉴스) |
| | | 北선전매체에 '김정은' 올렸더니...'경애하는 김정은' 수정게시(연합뉴스) 北 '200일전투' 반환점...“SLBM 대성공, 경이적 성과” 주장(연합뉴스) |
| | 9.8 | 김원홍 北 보위부장, 군부 비리 넘겨 김정은 신임 얻어(연합뉴스) |
| | | 北, 국경절 중앙보고대회 개최...수소탄 보유 핵 강국(연합뉴스) |
| | | 북한 “北적십자회 함경북도 홍수 피해 구호활동”(연합뉴스) 北, 정권수립일 앞두고 김정은 찬양...위대한 태양(연합뉴스) 北 “김일성, 인천상륙작전 미리 간파했다” 허위주장(연합뉴스) |
| 9.9 | 주러 北대사, 핵억제력 강화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연합뉴스) | |
| | 김정일 통역사 출신 김성남 北 국제부 부부장 방중(연합뉴스) | |
| | 北교과서 '9.9절' 조작...“남북총선거 거친 합법정부”(연합뉴스) <北 핵실험>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 전문(연합뉴스) | |
| 경제 | 9.4 | 中, 상반기 민감 제품군 대북 수출 급증(연합뉴스) |

| | | | | | |
|-------|-----|---|---|--|--|
| | 9.5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평화 경제발전 담보(연합뉴스) | | | |
| | 9.6 | 통일부 “北, 해외과전자 활동 위축·외회수급 차질”(연합뉴스) | | | |
| | 9.7 | [단독]北, 제재물품 구입 수법 정교·중개인·재외공관 적극 활용(연합뉴스) 中 두만강 일대 중국관 관광특구 조성·연간 200만명 유치(연합뉴스) ‘북한 연결’ 중단등~선양 고속철 개통 1년만에 1천만명 돌파(연합뉴스) | | | |
| | 9.8 | 美전문가 “北경제 달러화 현상, 병진노선 김정은에 불리”(연합뉴스) 中 국제박람회에 북측 인사 첫 초청·“북중교류 재개 염두”(연합뉴스) | | | |
| 사회 문화 | 9.6 | 北나선특구서도 택시 영업·평양 신의주 포함 총 3곳(연합뉴스) | | | |
| | 9.7 | 北, 제재 맞서 전시성 사업하다 수해복구 차질(연합뉴스) | | | |
| | 9.8 | 北 협동농장들, 추수 앞두고 홍수 피해·인력난 이중고(연합뉴스) | | | |
| 외교 국방 | 9.3 | 北 “美 핵잠수함, 우리 잠수함 비밀리에 추적” 주장(연합뉴스) | | | |
| | 9.5 | 美,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동아시아정상회의서도 문제 제기”(연합뉴스) G20 잔칫날에 北미사일 발사·중국 ‘속얕이’(연합뉴스) 日, 미사일 발사 北에 엄중 항의·아베 “만전 대비”(연합뉴스) 유럽, 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 의무 심각한 위반(연합뉴스) 사우디 “北도발, 걸프 안정도 위협”·한-사우디 회담(연합뉴스) 北, 한중 정상회담 직후 노동미사일 3발 발사·1천km 비행(연합뉴스) 日방위성 “北미사일 3발 모두 1천km 날아 日 EEZ 낙하 추정”(연합뉴스) 北 미사일능력 어디까지인가·무수단·SLBM·노동 잇단 ‘성공’(연합뉴스) | | | |
| | | 9.6 | 오바마 “북한, 도발적 무기실험으로 고립 심화할 것”(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에 6일 긴급회의 소집(연합뉴스) ‘북핵지원설’ 파키스탄도 제재동참·北고려항공 입항금지(연합뉴스) 美전략사령부, 北발사 미사일 3발중 2발 중거리·1발은 평가중(연합뉴스) 日언론 “北, 미사일 동시발사로 MD무력화·정밀도 높아져”(연합뉴스) 軍, 5일 발사한 北미사일은 개량형 노동·한미 같은 분석(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미사일 다량발사, 사드 회피용 가능성”(연합뉴스) | | |
| | | | 9.7 | 美 상·하원 외교위원장,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단독]北 6자회담 차석대표 최선희, 베이징 전격 방문(연합뉴스) 北 인민무력부 고위대표단 러시아 무기전시회 참가(연합뉴스) 안보리, 북 미사일 규탄 언론성명 채택·중국도 즉각 합의(연합뉴스) | |
| | | | | 9.8 | 성김 美대북정책특별대표, 10~13일 한일 방문·北도발대책 논의(연합뉴스) 美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또 발령(연합뉴스) 로즈 美NSC 부보좌관, 北 핵·미사일 포기시 사드배치 재고(연합뉴스) 美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또 발령(연합뉴스) |

| | |
|-----|--|
| | 美공군, 北 미사일 발사 직후 ICBM 시험발사(연합뉴스) |
| | 美보수매체, 北체제 생명줄 역할 고려항공 외국취항 중단시켜야(연합뉴스) |
| | 北외무성, 오바마 '미사일 규탄'에 "단말마적 발악" 비난(연합뉴스) |
| | 러 외무차관,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연합뉴스) |
| | 러 극동개발부 차관, 북한과의 관계 극동 지역의 우선 과제(연합뉴스) |
| | 나미비아, 北기업과 관계 끊었지만 외교관계는 지속(연합뉴스) |
| | 아세안 "한반도 상황 깊이 우려"...北에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연합뉴스) |
| | 中·러 포함 EAS 정상, '북핵포기' 비확산성명 첫 채택(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올랑드 佛대통령, 국제결의 위반 강력 규탄(연합뉴스) |
| | 北미사일 기습능력 향상...미군 레이더 기지 타격 연습한 듯(연합뉴스) |
| | OPCW 사무총장 "北,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 비축 의혹"(연합뉴스) |
| | 美하원 '北핵·미사일 도발 규탄·한미일 3각공조' 결의안 처리(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美백악관, 상황 면밀히 관찰·평가중(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美, 대북석유수출 금지 등 모든 구명 차단 나설 듯(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CNN "미국, 핵폭발탐지전문 특수항공기 한반도 발진 예정"(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中당국, 北지진 5분만에 2급대응체계 가동(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중국 외교부 "결연히 반대" 성명 발표(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아베 "가장 강한 말로 비난"...日, 추가 독자제재 검토(연합뉴스) |
| | 日외무상 "핵실험이면 유엔 결의위반, 안보리서 긴급대응할 것"(연합뉴스) |
| 9.9 | <北 핵실험> 북일관계 더 얼어붙을 듯...독자제재 강화 가능성(연합뉴스) |
| | 롯데쇼핑, 핵기술 北유출 의혹, 일본 거부로 현지조사 불발(연합뉴스) |
| | 푸틴 러 대통령, 北 정권수립일 맞아 김정은에 축전(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15개 이사국 전화협의...안보리 9일 긴급대책회의(연합뉴스) |
| |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규모 5.3 지진...역대 최대 규모 폭발력(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입구 3개 모두 활동 있었다(연합뉴스) |
| | 日방위상, 北핵기술 성숙...소형화·탄두화 가능성(연합뉴스) |
| | <北 핵실험> 日전문가, 소형화·탄두화 실험...핵미사일 최종 완성단계일수도(연합뉴스) |
| | 美전문가, 北 5일 발사 미사일은 스커드-ER(연합뉴스)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9. 6.

■ 北김정은, 핵무력 계속 확대해야...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뇌성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긴 역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한 자리에서 발사 훈련이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5일 낮 12시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이들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1천km 내외로 파악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9. 3.

■ 태영호 망명 후 영국주재 北외교관들 '두문불출'(연합뉴스)

- 태영호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의 한국 망명 이후 런던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주일 국제탈북인연대 사무총장은 RFA에 “태 공사 망명이 공개된 이후 (런던 서부 외곽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을 가 봤지만, 외부와 통하는 문이 잠겨 있었고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2주 정도 지난 현재까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함.
- 김 사무총장은 북한 대사나 대사관 직원의 소환과 같은 특이 상황도 감지되지 않았다고면서 “예전에는 야시장 같은 곳에서 가끔 북한 외교관이나 가족의 모습을 봤지만, 최근에는 못 봤다”고 설명함.

2016. 9. 5.

■ **북한, 터키 대사에 차건일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터키 주재 대사에 차건일 불가리아 주재 대사를 새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5일 “차건일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8월 31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보도함.
-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대사 등을 겸임하는 차건일 신임 터키 대사는 북한 과학원 국장과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소장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짐.

2016. 9. 6.

■ **北, 김양건 전 통전부장 등에 ‘조국통일상’ 수여(연합뉴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정령을 통해 김양건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11명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정령은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 헌신한 성원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였다”며 “그들은 존엄 높고 변영하는 통일 강국을 일떠세우기(기운차게 일어서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치었다”고 주장함.
- 이번에 조국통일상을 받은 인물은 김양건 전 통전부장과 강관주 전 당 대외연락부장 등 모두 11명임. 조국통일상은 1990년 7월 25일 제정돼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했다는 남북한 및 해외 인물에게 수여됨.

2016. 9. 8.

■ **김원홍 北 보위부장, 군부 비리 넘겨 김정은 신임 얻어(연합뉴스)**

- 김원홍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군부의 사생활과 비리를 파악해 김정은에게 넘기면서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대북 소식통은 RFA에 “김원홍은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에 그와 인연을 맺었다”면서 “김정은이 군부 장악을 위해 인민군 총정치국에 출근할 때 1년 동안 곁에서 도와준 사람이 김원홍”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당시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을 맡고 있던 김원홍이 북한군 상층부의 사생활과 비리를 파악해 김정은에게 넘겨 군권 장악에 크게 기여해 김정은의 신임을 얻었다”고 덧붙임.

2016. 9. 9.

■ **주러 北대사, 핵억제력 강화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연합뉴스)**

-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가 9일 보도함.
- 김 대사는 지난 7일 주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68주년 기념행사에서 “지금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눈앞에 숭한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북한)을 핵선제 공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망동으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북러관계에 대해 그는 “조러(북러)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외교 공관 대표로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축하함.

■ **김정일 통역사 출신 김성남 北 국제부 부부장 방중(연합뉴스)**

- 북한의 김성남(63)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8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9일 “김 부부장이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어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귀빈실을 거쳐 시내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함.
- 한 관측통은 최 부국장은 이미 귀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체류기간에 중국 측과 특별한 양자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다. 공식행사

2016. 9. 6.

■ **北, 10년만에 ‘계획일꾼 열성자회의’…김정은에 ‘충성맹세’(연합뉴스)**

- 북한의 ‘전국 계획일꾼 열성자회의’가 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북한에서 이번 행사가 열린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인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처음임.
- 앞서 북한은 지난 1996년 국가계획기관 창립 50돌(3.6)을 맞아 ‘전국 계획일꾼 열성자회의’를 처음 개최함.

■ **北 농근맹 대회 34년 만에 열린다..12월 평양서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농민들의 대표 조직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대회를 34년 만인 오는 12월 개최할 예정임.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가 주체 105(2016)년 12월 상순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대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7차 대회 이후 동맹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농근맹 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고 설명함. 농근맹 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82년 12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임.

2016. 9. 8.

■ **北, 국경절 중앙보고대회 개최..수소탄 보유 핵 강국(연합뉴스)**

-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가 8일 개최된 정권수립 68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북한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주체의 핵 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박 총리는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 못 하는 천하무적의 군사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날 보고대회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 등이 참가함.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9. 4.

■ **北 개정헌법, 김일성·김정일 ‘수령’·‘령도자’ 호칭 생략(연합뉴스)**

-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각각 붙였던 ‘수령’, ‘령도자’(영도자)라는 호칭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4일 북한의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인터넷에 올린 북한 사회주의 헌법 최신판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적혀 있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김일성·김정일 수식어를 바꾼 점은 특이하다”면서 “김일성·김정일 대신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 SLBM 발사 관련자 환송에 10만명 동원(연합뉴스)

- 북한이 10만여 명을 동원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관련자들을 환송하는 행사를 지난 2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4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평양의) 수십 리 연도에 늘어선 10여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증시험발사의 성공으로 주체조선의 승전포성을 다시 한번 높이 울린 미디어운 애국자들을 향해 꽃다발을 흔들며 뜨겁게 배례해주었다”고 전함.
-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참여한 인물들을 위해 10만여 명의 평양시민을 동원해 환송식을 열었으며,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자들을 위한 평양 입성 환영식에는 수십만 명을 불렀음.

■ 北, 청년층 충성 촉구…김정은, 청년동맹은 당 다음 조직(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7~28일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대회 이후 연일 청년 세대를 향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촉구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정론에서 “청년동맹은 당(조선노동당) 다음가는 정치 조직이라고, 청년들은 나의 살붙이나 같다고 하시며 청년중시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이라고 전함.
- 북한이 이처럼 ‘청년 챙기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엘리트층의 잇단 이탈로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청년층의 충성심을 고취시켜 유일 영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2016. 9. 6.

■ 北, ‘김정은 참관’ 노동미사일 발사 사진 9장 공개(연합뉴스)

- 북한은 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1면에 관련 컬러사진 9장을 게재함. 통신은 구체적인 훈련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전날 진행된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사진에는 김정은이 김락겸 전략군 대장, 박영래 전략군 중장,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 부장, 리만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초소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는 장면이 담김.

■ 北TV, 미사일 발사영상 하루만에 공개…日 사정권 압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3시42분(평양시간 3시12분)께 전날 실시한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방송함.
- 중앙TV는 이날 공개한 1분 50여 초 짜리 영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함.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지도의 궤적 표시 등은 발사 장소를 동쪽으로 옮겼을 경우 일본 도쿄 등도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 '애국열사릉'에 유해 4구 새로 안치(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평양 형제산 구역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유해 4구를 새로 안치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열사(열사)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되었다”면서 “열사들 가운데는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 한생을 다 바친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 조선인민군 장령(장성)이었던 리찬복, 리동규, 반일애국렬사 전명섭이 있다”고 소개함.
- 우리의 국립 현충원에 해당하는 애국열사릉은 북한 정권이나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위해 헌신한 간부들이 사망한 뒤 묻히는 곳임.

2016. 9. 7.

■ 北대남기구 “美침략군 남조선 강점 71년”…반미투쟁 선동(연합뉴스)

- 북한은 미군의 한반도 진주일(1945년 9월8일)을 하루 앞둔 7일 한국과 미국을 막말로 비난하며 ‘반미 투쟁’을 선동함.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날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어느덧 71년이 되었다”며 “강점자들은 이 땅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발톱을 더 깊숙이 박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호소문은 이어 남한 정부가 “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위력 앞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

미제 침략군의 영구 강점을 애걸하는 추악한 망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이어감.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침략 정책을 비호 두둔하며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을 민족의 역센 무쇠주먹으로 짓밟개버리자”고 선동함.

■ **北선전매체에 ‘김정은’ 올렸더니…‘경애하는 김정은’ 수정게시(연합뉴스)**

- 북한이 언론뿐만 아니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자유게시판마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7일 보도함.
- VOA는 최근 우리민족끼리의 자유게시판에 날씨, 북한 체제 비판, 외세에 대한 비난을 담은 북한 체제 옹호,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김정은’으로 잘못 쓴 찬양글 등 4건의 글 게시를 시도함. 이렇게 올린 글 가운데 하루가 지나서야 2건만 그대로 또는 수정된 채 게시판에 올라옴. 북한 체제 옹호 글은 원문 그대로 게재됨.
-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사악하게 유린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함.

2016. 9. 8.

■ **북한 “北적십자회 함경북도 홍수 피해 구호활동”(연합뉴스)**

- 북한 적십자회가 함경북도 지역 큰물(홍수)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북한 적십자회 관계자는 “현지에 파견된 조선 적십자회 긴급구호 일꾼들은 함경북도 적십자 지부와 조선에서 사업하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연맹(국제적십자자연맹,IFRC) 대표단 성원들과 협력해 피해 후과를 가시고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적십자회는 비축해둔 5천여 세대 분량의 긴급 구호 물자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다고 통신은 설명함. 물품은 천막, 주방용품, 이불, 물통 등 각종 생활 필수품임.
-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북한 동북부 지역을 휩쓴 홍수로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실종됐다면서 북한 적십자회가 천막, 물통, 수질정화제, 담요가 포함된 긴급 구호세트 2천5백여 개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음.

2016. 9. 9.

■ **北교과서 ‘9·9절’ 조작…“남북총선거 거친 합법정부”(연합뉴스)**

- 북한이 ‘국경절’ 또는 ‘9·9절’로 부르는 정권수립일(9월9일)은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10일(쌍십절)과 함께 북한 5대 명절에 포함됨. 북한 교과서는 9·9절을 기술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옴.
-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9일 북한 교과서에 무수한 역사 왜곡 사례가 실렸는데 9·9절도 날조됐다고 밝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한 총선거를 거쳐 수립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가르친다는 것임.
- 서 위원은 일부 한국사 검정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나 매체의 왜곡된 역사 해석을 그대로 옮겼다는 주장도 함.

■ **〈北 핵실험〉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 전문(연합뉴스)**

-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9일 성명을 통해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관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며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힘.
- 다음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성명 전문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성명 전문】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관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어왔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 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시험분석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리용결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증되었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 누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분렬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주체105(2016)년 9월 9일 평양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9. 6.

■ 北, 핵억제력 강화 물러서지 않아…빈말 아니다(연합뉴스)

- 북한은 6일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앞으로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나갈 것이다’라는 글에서 “미국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 강화의 길에서 우리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의 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역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바 있다”고 촉구한 바 있음.

■ 北매체 “제재가 오히려 강국건설 촉매제 역할” 주장(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시행 6개월을 맞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6일 주장함.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반공화국제재결의 2270호 조작 6개월이 보여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세전문가들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우리 공화국에 훌륭한 선물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앞서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대북 제재 6개월을 맞아 열린 좌담회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유례없이 가혹한 제재 소동에 열을 올렸지만 자력자강의 힘을 천백 배로 해줬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난 2일 전함.

■ **北 매체, 정권수립일 68주년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국경절’ 또는 ‘9·9절’로 부르는 정권수립일(9월 9일) 68주년을 앞두고 매체들을 동원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트 타르모 출판사의 마웅 마웅 나잉 총사장이 지난 2일 발표한 담화를 소개함.
- 담화는 “김일성 주석은 조선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모든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인민의 이익(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고 밝힘. 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멕시코와 앙골라, 인도네시아 등에서 정권수립일 경축행사가 잇따라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2016. 9. 7.

■ **北 ‘200일전투’ 반환점…“SLBM 대성공, 경이적 성과”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월 시작된 속도전 사업 ‘200일 전투’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0일 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향해 연속공격, 계속 전진해 나가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의 대성공을 비롯한 경이적인 승리와 성과들은 새로운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제국주의 반동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안겨줬다”고 주장함.
- 우리 정부는 ‘200일 전투’가 지난 6월 시작해 12월 중순에 끝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2016. 9. 8.

■ **北, 정권수립일 앞두고 김정은 찬양…위대한 태양(연합뉴스)**

- 북한은 정권수립일(9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며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태양의 품, 인민공화국’이라는 글에서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이 땅에 예순여덟 돌기의 연륜을 새기며 우리 공화국의 탄생일이 다가왔다”고 밝힘.
- 신문은 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거 활동을 돌아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진정 이것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 생이 뜨겁게 어려있는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함.

■北 “김일성, 인천상륙작전 미리 간파했었다” 허위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인천상륙작전 66주년(9월15일)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구상을 사전에 간파해 물리쳤다는 허위주장을 내놓음.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8일 ‘수령님과 일화(572):과탄된 상륙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는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군산항에 대한 허위 상륙작전을 벌려(벌여)놓고 있었다”면서 “(김일성)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진짜 기도는 인천으로 상륙하여 서울을 강점함으로써 락동강(낙동강) 전선의 이군 주력을 ‘포위소멸’하려는 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고 밝힘.
- 이에 남정옥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영화 흥행 성공으로 부각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희석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김일성은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허를 찔러) 제대로 대응도 못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2016. 9. 6.

■북한, 다양한 외자 유치 정책에도 효과는 미미(연합뉴스)

- 북한이 다양한 외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옴.
-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북한 외자 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함.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개방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등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역시 효과는 미미하다”며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이런 노력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함.

나. 주요조치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6. 9. 6.

■ 통일부 “北, 해외파견자 활동 위축…외화수급 차질”(연합뉴스)

- 통일부는 6일 대북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축소, 금융거래 제한, 인적 제재 등으로 북한 해외파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북한의 외화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올해 4~7월 북·중 무역액은 17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기(19억달러) 대비 7.3% 감소했다. 무연탄 수출액은 3억2천만달러로 작년 동기(4억3천만달러) 대비 24.4%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통일부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명분으로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민 불만과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김정은은 여명거리 등 치적성 건설사업에 전념하면서, 경제분야 공개활동 등을 통해 주민 불만 무마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 9. 7.

■ [단독]北, 제재물품 구입 수법 정교…중개인·재외공관 적극 활용(연합뉴스)

- 200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품을 사들이는 북한의 수법이 매우 정교해졌으며, 특히 중국 내 중개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외교 공관을 밀수입 경로로 쓰는 사례가 잦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6일(현지시간)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 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에 따르면 미국 금융권 출신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존 박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과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존 월시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이들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에서 자국의 법규를 적용해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품을 사들이는 북한의 국영무역회사를 추적하고, 북한 국영무역회사와 거래하는 중국 민간기업에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제안함.
- 이어 이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 능력을 키우고 유엔 전문가패널의 활동 능력을 강화하며, 미국 정부에서 재외공관을 밀수 통로로 이용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응할 수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의함.

2016. 9. 8.

■ **美전문가 “北경제 달러화 현상, 병진노선 김정은에 불리”(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의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 이후 북한 경제가 외견상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달러가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달러화 현상'(달러라이제이션)의 여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됨.
- 미국 조지타운 대학 윌리엄 브라운 객원교수는 7일(현지시간) 펴낸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해 “2013년 3월 병진노선 발표 이후 쌀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달러 환율도 2~3% 하락하는 등 북한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른 기현상”이라고 밝힘.
- 브라운 교수는 이 같은 달러화 현상은 결국 북한의 정부 금융 기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김정은에게는 불리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9. 4.

■ **中, 상반기 민감 제품군 대북 수출 급증(연합뉴스)**

- 올 상반기 중국에서 원자료가 포함된 민감 제품군의 대북한 수출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옴.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중국 공식 통계를 인용, 상반기 국제관세협정 상 제84류로 분류된 제품군이 대북 수출품목군 2위로 올라섰다고 전함.
-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의 류밍(劉鳴)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한 제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제트기 연료와 로켓 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유엔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관측함.
- 류 주임은 “중국이 북한과 북한 정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필요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함.

2016. 9. 5.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평화 경제발전 담보(연합뉴스)**

-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5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함.
- 개막식에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김영재 대외경제상, 김인철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주북한 각국 외교 대표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함.
- 방송은 이번 전람회에 북한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쿠바, 뉴질랜드, 호주 등의 280여 개 회사들이 상품을 출품했다고 전함.

2016. 9. 7.

■ **中 두만강 일대 중국판 관광특구 조성…연간 200만명 유치(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두만강 일대에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중국판 관광특구가 들어섬.
- 7일 연변일보 등에 따르면 연변자치주가 허룽임업회사, 연변 링제(凌界)국제관광회사와 두만강 삼림공원 내에 ‘관광풍경구’를 조성키로 함.
- 허룽임업회사와 링제관광회사는 이를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 삼림공원 안에 총 1만2천여 ha 규모의 풍경구를 조성해 향후 20년간 공동운영하기로 함.

■ **‘북한 연결’ 中단둥~선양 고속철 개통 1년만에 1천만명 돌파(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무역창구와 이어지는 중국 단둥(丹東)~선양(瀋陽) 간 고속철도가 개통 1년 만에 연간 여객수송 1천만명 시대를 열었음.
- 7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단둥~선양 간 고속철도는 작년 9월 초 개통한 이래 이용객들이 줄곧 큰 폭으로 증가해 지금까지 모두 1천32만명의 여객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됨.
- 선양철로국 관계자는 “단둥~선양이 1시간 생활권에 들면서 여객 및 화물 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며 “특히 고속철을 타고 단둥에 도착한 뒤 관광, 친척방문 등의 목적으로 조선(북한)을 찾는 승객들도 늘고 있다”고 말함.

2016. 9. 8.

■ **中 국제박람회 북측 인사 첫 초청…“북중교류 재개 염두”(연합뉴스)**

- 북한과 마주한 중국 동북 지방정부가 최근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한국기업에 최다 부스를 배정하면서도 북한 공관 인사를 처음 초청하는 등 북중교류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 8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정부는 지난 1~5일 선양(瀋陽)국제 전람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 장비제조업 박람회’ 개막식에 구영혁 주 선양 북한총영사를 초청하고 축사를 맡김.
-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행사에 북한측 인사가 참가해 축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북중교류 재개를 겨냥한 ‘계산된’ 행보로 풀이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9. 6.

- **北나선특구서도 택시 영업…평양 신의주 포함 총 3곳(연합뉴스)**
 - 북한 나선(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 올해부터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제6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했던 중국의 한 사업가는 RFA에 “나선지구에서 택시가 운행되고 있었다”면서 “나선지구의 택시 영업은 이미 지난봄부터 시작됐다는 현지 주민들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함.
 - 택시요금은 내·외국인 모두 외화로 지불하며, 주로 중국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016. 9. 7.

- **北, 제재 맞서 전시성 사업하다 수해복구 차질(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자강력으로 맞서겠다는 북한이 무리한 대외용 보여주기식 사업에 나서면서 전시 예비물자까지 고갈됐으며 홍수 피해 복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7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 전시 예비물자로 보관하던 시멘트와 철강재가 국가건설 사업으로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며 “전시에 쓸 시멘트와 철강재는 각 도 ‘50호 사업소’에 보관됐는데 올해 북한당국은 유엔의 제재에 맞선다며 평양과 지방에 술한 건설관을 벌려(벌여) 놓고 사업소에 보관됐던 시멘트와 철강재를 꺼내 썼다”고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전시 예비물자를 타산 없이 쓰다가 정작 큰물피해가 발생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며 “이번 장마로 농작물 피해도 커 수해지역 주민들은 또 ‘고난의 행군’이 오는 것 아니냐는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고 RFA에 설명함.

2016. 9. 8.

■ **北 협동농장들, 추수 앞두고 홍수 피해·인력난 이중고(연합뉴스)**

- 추수를 앞둔 북한 북부산간지대 협동농장들이 홍수 피해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협동농장들에 이달 10일부터 가을걷이를 시작하라는 농업성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러나 최근 홍수로) 땅이 질척일 정도로 물이 빠지지 않아 현재로선 감자파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최근 두만강 유역에 사상 최대의 홍수가 발생해 논밭 7천914 ha가 침수되고, 2천82 ha가 유실됐으며, 공공건물 560채와 생산건물 30채, 교육기관 건물 20채가 파괴·침수됐다고 지난 6일 보도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9. 3.

■ **北 “美 핵잠수함, 우리 잠수함 비밀리에 추적”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 핵잠수함이 지난해부터 자신들의 잠수함들에 대한 추적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3일 주장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 핵잠수함들이 지난해부터 조선 동해의 우리나라 주변 국제해역에서 우리 전략 잠수함들에 대한 추적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며 “산생되는 파국적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함.

2016. 9. 5.

■ 美,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동아시아정상회의서도 문제 제기”(연합뉴스)

- 미국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3발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에서는 물론 6일 개막될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무모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도 위협이 된다고 비난함.
- 미국 관계자들은 적절한 대응과 유엔에서의 문제 제기를 위해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6일 라오스에서 시작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거론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2016. 9. 6.

■ 오바마 “북한, 도발적 무기실험으로 고립 심화할 것”(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을 향해 도발적인 무기실험으로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함.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역대 지도자 서밋 행사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국제 사회가 단결해 북한에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함.

2016. 9. 7.

■ 美 상·하원 외교위원장,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 미국의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장이 나란히 지난 5일 북한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7일 보도함.
-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규탄함.
 - 한편, 6일 의사일정이 재개돼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 내에 하원에 계류 중인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H.R.4501) 등 북한 관련 법안이 추가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VOA는 전함.

2016. 9. 8.

■ 성김 美대북정책특별대표, 10~13일 한일 방문…北도발대책 논의(연합뉴스)

-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0~13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7일(현지시간) 밝힘.
- 김 특별대표는 먼저 10~12일 일본에서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며, 이어 12~13일 한국을 찾아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함.
- 김 특별대표의 이번 한일 양국 방문은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의 마지막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임. 김 특별대표는 현재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 내정된 상태로, 지난 7월 상원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을 기다리고 있음.

■ 美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또 발령(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또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주의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힘.
- VOA는 “매년 북한과 함께 이름을 올리던 이란은 올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주의 조치’ 국가로 하향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유일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됐다”고 설명함.

■ 로즈 美NSC 부보좌관, 北 핵·미사일 포기시 사드배치 재고(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힘.

-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로즈 부보좌관은 전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냐는 질문에 “우리(미국)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답함.
- 한국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시 주석과 만나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함. 이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조건부 사드배치론’ 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 **美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또 발령(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또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주의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힘.
- VOA는 “매년 북한과 함께 이름을 올리던 이란은 올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주의 조치’ 국가로 하향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유일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됐다”고 설명함.

■ **美 공군, 北 미사일 발사 직후 ICBM 시험발사(연합뉴스)**

-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난 5일 미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남.
- 7일 미 공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탄두 대신 계측장비를 장착한 ‘미니트맨 3’ 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이 약 6천500km 떨어진 남태평양 과잘렌 환초 인근 목표 지점에 떨어짐.
- 미 공군은 보유 ICBM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발사에 나섰다고 설명함. 이번 실험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보장하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공군은 덧붙임.

■ **美 보수매체, 北체제 생명줄 역할 고려항공 외국취항 중단시켜야(연합뉴스)**

- 미국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7일(현지시간) 고려항공이 북한 정권의 '핵심 생명

줄(vital lifelines)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 취항 금지 등 직접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함.

- 워싱턴프리비컨은 이날 ‘에디터 블로그’에서 “서방 미디어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해 북한의 유일 민간항공이라는 측면을 부각하며 일종의 유머거리로 다뤄왔다”면서 “그러나 고려항공은 더 이상 농담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함.
- 워싱턴프리비컨은 “고려항공은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 체제의 핵심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항공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중동지역에 파견된 ‘국의 노예노동자’ 수천 명의 급여를 북한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돼 왔다”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고려항공은 쿠웨이트, 방콕, 쿠알라룸푸르 취항 금지 등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향후 추가 대북제재가 추진될 경우 국제노선 취항 금지를 포함해 고려항공과의 어떤 협력도 금지한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北외무성, 오바마 ‘미사일 규탄’에 “단말마적 발악”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규탄 발언에 대해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한 발언을 트집잡았음.
- 대변인은 “오바마의 이번 망발은 저들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016. 9. 9.

■ **美하원 ‘北핵-미사일 도발 규탄-한미일 3각공조’ 결의안 처리(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국·미국·일본의 3국 간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H.Res.63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일련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와 핵확산 노력을 저지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힘.
- 이번 결의안은 하원이 여름 휴지기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개원 이틀 만에 신속히 통과시

킨 것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北 핵실험> 美백악관, 상황 면밀히 관찰·평가중(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먼저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놓음.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힘.
- 또 다른 NSC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도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지진 활동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 <北 핵실험> 美, 대북석유수출 금지 등 모든 구멍 차단 나설 듯(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정부는 이미 대북제재법과 다양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언제나 추가 대북제재에 돌입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놓은 상태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 정부는 양자제재에 앞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를 통한 1차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 <北 핵실험> CNN “미국, 핵폭발탐지전문 특수항공기 한반도 발진 예정”(연합뉴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 미국은 핵폭발 탐지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수항공기를 한반도에 곧 발진시킬 예정이라고 미 CNN방송이 9일 보도함.
- CNN은 ‘콘스탄트 피닉스’(Constant Phoenix)로 알려진 미 공군 소속의 WC-135기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대기 분석을 위해 출격, 핵실험 과정에서 나온 물질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함.
- 미 공군은 현재 서부 네브래스카주 오폫 공군기지의 제45 정찰비행단에 WC-135기 두 대를 배속시켜 운영 중임.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미 공군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서 WC-135기-135기 한 대를 발진시킨 것으로 알려짐.

나. 북·중 관계

2016. 9. 5.

■ **G20 잔칫날에 北미사일 발사·중국 ‘속얕이’(연합뉴스)**

- 중국 언론이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한 채 속병을 앓는 모습을 보임.
- 북한을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한반도 당사국에 긴장 조성을 하지 말라고 했던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G20 잔칫상에 사실상 물을 끼얹은 북한을 굽지 않게 보는 분위기임.
-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은 5일 북한이 이날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사실을 연합뉴스 등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섬.

2016. 9. 7.

■ **(단독)北 6자회담 차석대표 최선희, 베이징 전격 방문(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52)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일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최선희 부국장이 어제(6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중국에 입국했다”며 “최 부국장은 통역을 데리고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힘.
- 북한 전문가들은 최 부국장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국면전화를 꾀하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016. 9. 9.

■ **〈北 핵실험〉 中당국, 北지진 5분만에 2급대응체계 가동(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발생 직후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해 북중 접경 등지에서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함.
- 중국 환경보호부와 국가핵안전국은 중국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8시35분(한국시간 오전 9시35분)을 기해 제2급(주황색)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함. 이는 북한에서 오전 9시30분 지진이 발생하자 불과 5분만에 긴급 대응한 것임.
- 중국 당국은 북중 접경을 포함해 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성 등 동북3성, 그리고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山東)성 등에서 방사능 관측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짐.

■ <北 핵실험> 중국 외교부 “결연히 반대” 성명 발표(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 중국 외교부는 9일 성명에서 “오늘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며 동북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함.
- 중국 외교부는 “북한은 비핵화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하라”고 요구함.

다. 북·일 관계

2016. 9. 5.

■ 日, 미사일 발사 北에 엄중 항의...아베 “만전 대비”(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국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항저우(杭州)에 머물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은 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지시함.
- 아베 총리는 스가 관방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동해상의 일본) 선박 등의 안전 확인, 예측 불가한 사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성청(부처)에 지시하라”고 당부함.

2016. 9. 9.

■ <北 핵실험> 아베 “가장 강한 말로 비난”...日, 추가 독자제재 검토(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강하게 항의하고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말로 비난한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함.

-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북한 정세 관저대책실’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日외무상 “핵실험이면 유엔 결의위반, 안보리서 긴급대응할 것”(연합뉴스)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9일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것에 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핵실험이라면 유엔 결의위반이고, 북일 평양선언위반이며, 6자 회담 선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함.
- 기시다 외무상은 핵실험으로 확인된 경우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 대응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했다고 밝힘.

■ <北 핵실험> 북일관계 더 얼어붙을 듯...독자제재 강화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독자제재를 강화했으며 이번엔 한 번 더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5월 북한과 일본의 ‘스톡홀름 합의’를 계기로 추진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정지 상태인 납치 문제 협상이 과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몰릴 것으로 예상함.
- 실제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층 더 독자제재를 생각하고 싶다”고 말함. 일본 정부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분명하며 일본이 납치 문제 협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 롯데쇼무라 핵기술 北유출 의혹, 일본 거부로 현지조사 불발(연합뉴스)

- 일본 롯데쇼무라(六ヶ所村) 핵연료주기(사이클) 시설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년 전 유엔이 현지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 9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0~2011년 유엔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아마모토 다케히코(山本武彦) 와세다(早稻田)대 명예교수는 북한 영변의 우리늄 농축시설에 롯데쇼무라의 기술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재임 중 제기돼 당시 유엔 측이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롯데쇼무라 방문 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힘.
- 아마모토 명예교수는 이달 2일 서울에서 아사히신문 등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함.

라. 북·러 관계

2016. 9. 7.

■ **北 인민무력부 고위대표단 러시아 무기전시회 참가(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에서 열린 무기 및 군사장비 전시회에 인민무력부(국방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대표단을 파견함.
- 모스크바 인근 쿠빈카 지역의 ‘파트리엇’(애국자) 군사공원에서 6일(현지시간) 개막한 제2차 국제 군사기술포럼 ‘군(軍)-2016’(Army-2016)에 북한이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됨.
- 포럼에 참석한 현지 전문가는 “유엔 대북 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대표단이 군사 분야를 포함한 러시아와의 우호적 협력 분위기를 유지하고 러시아제 첨단 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2016. 9. 8.

■ **러 외무차관,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관련국들이 이를 군사활동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8일(현지시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에도 반대하는 등 대결 수위를 높이는 남북한 모두에 양비론을 펴고 있음.

■ **러 극동개발부 차관, 북한과의 관계 극동 지역의 우선 과제(연합뉴스)**

- 북한과의 관계가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러시아 정부 고위인사가 7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시베리아 극동 지역 개발을 책임지는 극동개발부 차관 키릴 스테파노프는 이날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68주년 기념

축하연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함.

- 스테파노프 차관은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내 모든 국가의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함.

2016. 9. 9.

■ **푸틴 러 대통령, 北 정권수립일 맞아 김정은에 축전(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수립일(9월9일)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축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에 즈음해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밝힘.
- 이어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 관계는 전통적으로 친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호혜적인 쌍무협조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조선 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 강화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임.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9. 5.

■ **유럽, 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 의무 심각한 위반(연합뉴스)**

- 유럽연합(EU)과 프랑스 등 유럽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서 규정한 국제적인 의무를 또다시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함.
- EU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 EU는 “북한이 이런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켜질 것”이라며 북한에 6자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함.

■ **사우디 “北도발, 걸프 안정도 위협”…한 사우디 회담(연합뉴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제2왕위 계승자와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사우디가

걸프협력회의(GCC) 의장국이자 국제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함.

- 이에 살만 왕위계승자는 “북한의 활동이 걸프지역 국가들의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사우디는 앞으로도 한국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함.

2016. 9. 6.

■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에 6일 긴급회의 소집(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동해 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함. 안보리 회의는 6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6일 밤~7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임.
- 한국, 미국, 일본이 5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함.
- 안보리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발사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북핵지원설’ 파키스탄도 제재동참…北고려항공 입항금지(연합뉴스)

- 파키스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270호) 이행 차원에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 보도함.
- 지난달 30일 쿠웨이트행 고려항공 JS161편은 과거 몇 년간 중간급유를 위한 기착지로 이용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 대신 중국 우루무치(烏魯木齊)공항에 들른 뒤 쿠웨이트로 향했으며, 돌아오는 JS162편 역시 우루무치를 경유함.
- 파키스탄 민간항공국(CAA) 관계자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2270호가 유지되는 한 (착륙 불허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함.

2016. 9. 7.

■ 안보리, 북 미사일 규탄 언론성명 채택…중국도 즉각 합의(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함.
-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곧바로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발 빠른 공식 대응임.

-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이 이날 전함. 두자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명확한 결의안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을 강조했다”고 말함.

2016. 9. 8.

■ **나미비아, 北기업과 관계 끊었지만 외교관계는 지속(연합뉴스)**

- 아프리카 나미비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거래 관계는 중단했지만 북한과 외교 관계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VOA에 “나미비아와 북한은 1990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만수대해외개발회사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로, 나미비아에 탄약공장을 건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아세안 “한반도 상황 깊이 우려”…北에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연합뉴스)**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8일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함.
- 아세안은 6~7일 라오스에서 10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의장 성명을 발표함. 아세안은 올해 1월 6일 북한의 핵 실험과 이후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한반도 전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힘.
- 이어 “아세안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북한에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모든 당사국에는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요구함.

■ **中·러 포함 EAS 정상, ‘북핵포기’ 비확산성명 첫 채택(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아세안 회원국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소속 18개국 정상들은 8일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함.
- EAS 정상들은 이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제11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 EAS 정상들은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국제적인 법적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 박근혜 대통령은 EAS에 참석해 비확산 성명 채택과 관련,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에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대북) 제재 이행에 허점(loophole)이 있다면 이를 메우고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비확산에 관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성명】

2016년 9월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정상은

모든 국가의 권리와 특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에 입각한 지역 및 국제 질서에 대한 EAS 회원국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하며,

상호 보완적인 축으로서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보유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의 연구·생산·이용 권리를 상기하며,

민간 원자력 에너지 성장 전망의 상당 부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에 주목하며,

EAS 참여국의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군축 및 세계적 비확산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NPT가 수행해 온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정치·외교적 수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동남아시아를 비핵지대로 유지하기로 한 ASEAN의 공약과, 지역 안보 및 세계적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SEANWFZ)의 기여를 환영하며,

1월 핵실험 및 2월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확한 규탄과 더불어, 북한이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위반 및 악의적으로 무시하면서 지속·반복적으로 실시해 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2016.3.2.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을 상기하고 충실히 지지하며,

서명을 위해 개방된 지 20년이 경과하였으며, 특히 핵 군축 과정에 기여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 테러리즘에 의해 야기되는 도전을 인식하며,

아래 사항을 실행토록 한다.

1.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내,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핵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핵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 NPT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 데 대한 각 회원국의 공약을 지지하며,
3. EAS 참여국, 특히 CTBT 제2부속서에 따라 조약 발효에 필수적인 잔여 국가들에 의한 CTBT 서명 및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실험폭발 및 여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 선언을 유지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하며,
4. CD/1299 및 그에 따른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기 합의된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작업계획의 맥락 내에서, 제네바군축회의(CD)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촉구하며,
5.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레짐과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6.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반, 이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1540을 완전히 이행할 것에 대한 EAS 참여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7. EAS 참여국이 IAEA, 유엔,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등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가입 및 지지를 통해 핵안보를 향한 노력을 가속하도록 권장하며,

8. 세계적인 비확산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안전조치체제의 효율을 개선하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추가의정서 보편화 및 이행 IAEA 안전조치체제의 강화를 지원하며,

9. 군축·비확산 진전 및 지역적·국제적 안보환경 개선의 기본으로서 투명성·신뢰구축 조치(TCBMs)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10.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모든 비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될 것을 권장하고, 기존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개정 협약을 비준할 것과 원자력 시설 및 물질이 평화적으로 국내적 이용, 저장, 수송될 수 있도록 방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을 권장하며,

11. 역량 강화, 관련 지역기구간 정보·우수사례 및 교훈 교환 등 비확산 관련 이슈에 있어 EAS 참여국 간의 심화된 협력을 권장하며,

12. 2016.9.8.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본 문서를 채택한다.

■ <北 핵실험> 올란드 佛대통령, 국제결의 위반 강력 규탄(연합뉴스)

- 프랑수아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함.
- 올란드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대통령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한 뒤 나온 새로운 도발 앞에 국제사회는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규탄 성명을 발표해왔음.

2016. 9. 9.

■ <北 핵실험> 15개 이사국 전화협의…안보리 9일 긴급대책회의(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 대응책 논의에 들어감.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확인된 후 8일 밤(현지시간) 15개 이사국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회의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서 일부 남겨뒀던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많음.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갖고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기로 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9. 5.

■ 北, 한중 정상회담 직후 노동미사일 3발 발사…1천km 비행(연합뉴스)

- 북한이 5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 비행거리는 1천km 내외”라고 밝힘.
- 합참은 이어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으로 사전 항행경로 발령 없이 발사됐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임.
-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됨.

■ **日방위성 “北미사일 3발 모두 1천km 날아 日 EEZ 낙하 추정”(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5일 북한이 이날 오후 동해상으로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3발의 미사일 모두가 약 1천km를 날아 동해상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 앞서 지난달 23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으며, 지난달 3일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1천km를 비행해 일본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km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바 있음.

■ **北 미사일능력 어디까지인가…무수단·SLBM·노동 잇단 ‘성공’(연합뉴스)**

- 북한이 준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 비행능력을 잇달아 과시하고 있음. 비행에 성공한 노동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급 미사일에 핵탄두까지 탑재하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 되는 미군 증원전력 뿐 아니라 주일미군기지까지 위협에 노출됨.
- 북한이 5일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3발은 모두 1천km 안팎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됨.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400여 km 침범해 해상에 떨어짐.
- 국방부는 “사드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확실히 요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2016. 9. 6.

■ **美전략사령부, 北발사 미사일 3발중 2발 중거리…1발은 평가중(연합뉴스)**

- 미국 전략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 상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3발 중 2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 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발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중”이라고 밝힘.
- 전략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황주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탐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전략사령부는 이어 “이번 미사일이 북미지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전략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북부사령부, 태평양 사령부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안보유지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日언론 “北, 미사일 동시발사로 MD무력화…정밀도 높아져”(연합뉴스)

- 북한이 5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3발을 쏜 것은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6일 일본 주요 신문은 미사일 3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돼 같은 구역에 낙하한 것은 타격 정밀도가 높아졌으며 중간에 이를 요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산케이(産經)신문은 “군사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3발이 동시에 발사돼 거의 같은 지점에 낙하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일본·미국·한국의 MD 무력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함.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이지스함 1척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격히 어려워진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고서 일본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 탑재형 이지스함이 4척뿐이며 일부는 동중국해 감시에 투입되고 있다고 방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함.

■ 軍, 5일 발사한 北미사일은 개량형 노동…한미 같은 분석(연합뉴스)

- 북한이 5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옴.
-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오늘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탄도미사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5일 발사된 이들 미사일은 그간 북한이 발사했던 노동미사일과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1천km를 비행했다”고 밝힘.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이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탄도미사일을 보면 탄두부가 전체적으로 원뿔 형태의 스킵드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추진체와 접합 부분에서 움푹 팬 모습이 식별됨.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지난 7월 21일 북한이 공개한 노동미사일의 탄두 모양과도 달랐음.
- 소식통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개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탄도로켓의 성능 개량 사실도 공개했고 실제 개량된 노동미사일을 보여줬다”고 말함.

■ 美전문가 “北 미사일 다량발사, 사드 회피용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노동 또는 스킵드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한데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방어 능력을 우회하려는 북한의 실험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됨.
-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담당국장은 6일 CNN

인터뷰에서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어무기로 막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쏘는 일”이라고 밝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의 알렉스 닐 연구원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사일 능력의 다변화를 통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풀이함.

2016. 9. 8.

■ 북미사일 기습능력 향상...미군 레이더 기지 타격 연습한 듯(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나 기습 공격 능력이 향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이달 5일 북한이 쏜 미사일 3발이 자국이 규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낙하하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확실히 향상됐다”고 언급했으며 전문가들도 북한 미사일 능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
- 북한은 2012년 4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약 8억5천만 달러(약 9천299억원)를 썼고 같은 달까지의 핵 개발에 약 65억8천만 달러(약 7조1천965억원)를 투입했다는 추산도 있음. 이들 자금은 북중 무역으로 확보한 돈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무기를 판 자금,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입 등으로 마련됐고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제재 망을 피한 무기 부품 조달도 이어진 것으로 보임.

■ OPCW 사무총장 “北,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 비축 의혹”(연합뉴스)

- “북한을 포함한 4개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윤리적인 정당성은 없어요. 더군다나 북한은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를 비축한 국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방한한 아흐메트 위립쥐(65·터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은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함. 위립쥐 사무총장은 “OPCW는 현재까지 북한당국과 접촉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면서 “유럽연합, 유엔 등의 북한 대표부에 여러 차례 회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힘.
- 위립쥐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화학무기의 최종 파기 시점은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학무기는 그 누구도, 어느 상황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면 그 행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함.

2016. 9. 9.

■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규모 5.3 지진…역대 최대 규모 폭발력(연합뉴스)**

- 북한이 9일 오전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규모 5.3 가량의 인공지진이 발생함. 폭발력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한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 분석도 나옴.
- 이날 오전 9시39분(한국시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오전 9시(북한시간 한국 시간 오전 9시30분) 북한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힘.
- 이날 북한의 지진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AFP통신을 시작으로 로이터, AP, 교도, 신화 등 각국 주요 통신사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함.

■ **<北 핵실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입구 3개 모두 활동 있었다(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 입구에서 지난달 말에 핵실험 준비 작업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힘.
- 정보분석업체 올로스 애널리시스의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과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잭 류 연구원은 8일(이하 현지시간) 38노스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27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핵실험이 이뤄진 북쪽 갱도 뿐 아니라 서쪽과 남쪽 갱도 입구에서도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힘.
-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달 4일 포착됐던 은폐용 차양이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입구 동쪽에 쌓인 폐석더미 위에서 광차를 비롯한 여러 물체가 4일 사진에 비해 많이 나타남.

■ **日방위상, 北핵기술 성숙…소형화 탄두화 가능성(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함.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혀 일본 방위 당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실험이 수소탄 실험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상청이 발표한 (핵실험으로 인한 진동의) 규모를 볼 때 수소탄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답함.

■ <北 핵실험> 日전문가, 소형화·탄두화 실험…핵미사일 최종 완성단계일수도(연합뉴스)

-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완성 단계에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과 일본 등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내놓음.
-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으며 한국·미국·일본의 연대가 특히 중요하다고 제언함.

■ 美전문가, 北 5일 발사 미사일은 스커드-ER(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 '스커드-ER'로 생각된다고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담당국장이 주장함.
-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나타난 미사일 발사차량 위 거치대의 길이가 ‘스커드-C’ 미사일에 쓰이는 것보다 약간 길었지만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었다”며 이런 의견을 냄.
- 디플로매트는 북한에서 올해들어 여러 번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달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500km 가량의 비행 거리를 기록한데 이어 스커드-ER 미사일도 발사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방어능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킬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무기들을 내보임으로써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이어 디플로매트는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 3발을 1분 안에 발사했으며, 이 또한 사드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한국 | 미국 |
|-------|--------------------------------------|---|--|
| 한미 관계 | 9.6 | | 오바마, 한미정상회담서 '확장억제' 재확인...북핵 대응의지 표명(연합뉴스) |
| | | 한미 공군, 6~8일 환태평양 공군협력 심포지엄...16개국 참가(연합뉴스) | |
| | | 한미일 軍 수뇌부, 필리핀서 회동...北미사일 방어 논의(연합뉴스) | |
| | 9.8 | 9월말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추진...대북압박 모색(연합뉴스) | |
| | | 한미일, 정책차장급 화상회의...北미사일 정보공유 강화(연합뉴스) | |
| | 9.9 | 한미, 북핵 대응 '확장억제력' 강화 논의...12일 KIDD 회의(연합뉴스) | |
| | | | <北 핵실험>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사드배치 서둘러야"(연합뉴스) |
| | | | <北 핵실험> 오바마 '北에 중대한 대가 확고부동한 동맹 방위공약 재확인(연합뉴스) |
| | | 한미정상, 핵우산 확장억제 조치...안보리 새결의 강력압박(연합뉴스) | |
| | 한미외교장관, 추가 대북조치 강구...중·러 동참 유도(연합뉴스) | | |
| 분류 | 일자 | 한국 | 중국 |
| 한중 관계 | 9.3 | 朴대통령, 中 항저우 도착...한중회담 등 G20 외교 돌입(연합뉴스) | |
| | | | 시진핑, 사드 염두 "냉전적 사고 포기해야"(연합뉴스) |
| | 9.5 | 朴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북핵공조·사드설득(연합뉴스) | |
| | | 朴대통령·시진핑, 한중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연합뉴스) | |
| | 靑 "한중 정상, 사드 진술한 첫 직접 대화가 성과"(연합뉴스) | | 시진핑, 朴대통령에 "美사드 한국배치 반대...핵심이익 존중해야"(연합뉴스) |
| | | | 시진핑 '음수사완'·'구동존이' 언급...한미일 공조에 견제구(연합뉴스) |

| | | | | |
|-----------|---------------------------------------|---|---|--|
| | | 유일호, 한중 사드 이전에도 경제문제는 감지 못해(연합뉴스) | | |
| | 9.6 | | 서울안보대화 내일 개막...중국 끝내 불참(연합뉴스) | |
| | 9.7 | | 중국 '한미 정상 사드 결속' 서울안보대화 불참 연계 보도(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일본 | |
| 한일 관계 | 9.3 | | 日언론 "한일, 라오스서 정상회담 개최 최종 조율"(연합뉴스) | |
| | 9.4 | | 아베, 한중 정상과 미래지향적 논의 진전시키고 싶다(연합뉴스) | |
| | 9.5 | 朴대통령-아베,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일 긴밀 연대 확인(연합뉴스) | | |
| | 9.6 | 朴대통령, 중리 이어 美·日과 정상회담...릴레이 4강 외교(연합뉴스) | | |
| | 9.7 | | 교도통신, 한일중 정상회의 이르면 11월 하순 도쿄 개최 조율(연합뉴스) | |
| | | | 한일 정상, 北도발에 한미일 3국 강력공조해 대응(연합뉴스) | |
| | | | 아베, 박대통령에 '소녀상 철거 포함' 韓·日합의 이행 희망표명(연합뉴스) | |
| | 9.8 | | 외교부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 이해와 협조 확보해야"(연합뉴스) | |
| | | | 일본, 소녀상 이전 요구 본격화하나...정부 '곤혹'(연합뉴스) | |
| | | 日언론 "북한 위협 속에 한일관계 개선 흐름" 평가(연합뉴스) | | |
| 9.9 | 한일외교장관, 北 핵실험에 '추가적 대북조치' 강구하기로(연합뉴스) | | | |
| 분류 | 일자 | 한국 | 러시아 | |
| 한러 관계 | 9.4 | 사드 파국 피한 한러정상, 경협·북핵 연계에 주파수 맞아(연합뉴스) | | |
| | | 한-러 정상, 북핵 용인 안해...전략적 소통 강화(청와대) | | |

2. 주변국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미국 | 중국 |
|-------|------------------------------------|---|--|
| 미중 관계 | 9.3 | 미중 정상회담...오바마, 한반도문제 포함해 폭넓은 대화 원해(연합뉴스) | |
| | 9.4 | 미·중 정상, 사드·남중국해·인권 놓고 '정면충돌'(연합뉴스) | |
| | 9.5 | | 中, 오바마 입국과정 '소동에 美 관리인론 비난(연합뉴스) |
| | | 미·중, 이번엔 '남중국해 분쟁 교두보' 라오스에 구애 경쟁(연합뉴스) | |
| | 9.8 | | 中, 필리핀 인근 스카보러암초 인공섬 박차...美해군, 순찰 검토(연합뉴스) 중국, 미국 겨냥 "남중국해 관련 주권 침해 반대"(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미국 | 일본 |
| 미일 관계 | | 美日, 베트남·필리핀에 방위지원 '보따리'...中포위망 강화(연합뉴스) | |
| | 9.8 | 美日-中 정상 남중국해 충돌...“판결 이행하라”vs“제3자 빠져라”(연합뉴스) 미일 라오스 정상회담 불발...오바마 참석회의 지연 때문(연합뉴스) | |
| | 9.9 | <北 핵실험> 미일 정상 전화회담 “새로운 제재 포함 조치 필요”(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미국 | 러시아 |
| 미러 관계 | 9.5 | 오바마-푸틴 양자회담, 시리아사태 합의못해...해킹문제도 논의(연합뉴스) | |
| | 9.8 | | 러 전투기 흑해상공 美정찰기에 3m 근접비행 '아슬아슬'(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중국 | 일본 |
| 중일 관계 | 9.5 | 中견제속 중일정상회담 막판성사...센카쿠 남중국해 대립 불가피(연합뉴스) | |
| | 9.6 | 아베, '남중국해 국제법 따라야 vs 시진핑, 日 언행 신중해야(연합뉴스) | |
| | | 中과 대화 강조한 日, 필리핀엔 中견제용 대형순시선 제공(연합뉴스) | |
| 9.7 | 중국서 '中 해양진출 우려 아베 발언 보도 '깜깜'(연합뉴스) | | |
| 분류 | 일자 | 중국 | 러시아 |

| | | | |
|-----------|-----------|--------------------------------------|------------|
| 중러 관계 | 9.4 | 시진핑·푸틴 '밀착' 과시...군사·안보협력 강화하자(연합뉴스) | |
| | 9.6 | 中 훈춘~러 자루비노~속초 북방항로 재개 '청신희'(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일본 | 러시아 |
| 일러 관계 | 9.3 | 아베, 러일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경제 협력도 강화(연합뉴스) | |
| | | 푸틴 만난 아베, 북한 핵·미사일에 엄격 대응해야(연합뉴스) |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9. 6.

■ 오바마, 한미정상회담서 ‘확장억제’ 재확인…북핵 대응의지 표명(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박 대통령도 “우리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미 공군, 6~8일 환태평양 공군협력 심포지엄…16개국 참가(연합뉴스)

- 한미 양국 공군이 6일 환태평양 국가간 공군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공군은 “오늘부터 이달 8일까지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와 함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환태평양 공군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힘.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외에도 일본, 호주, 필리핀,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의 공군 주요 간부 61명이 참석함.
- 원인철 공군참모차장(중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발전적 논의의 장이 되고 환태평양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 한미일 3국 군 수뇌부, 필리핀서 회동…北미사일 방어 논의(연합뉴스)

- 한미일 3국 군 수뇌부가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체계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미 태평양사령부는 6일 웹사이트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 고위급(CHOD: Chiefs Of Defence) 회의를 계기로 엄현성 한국 합참차장, 가와노 가쓰도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과 3자 회동을 했다”고 밝힘.

-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한미일 3국은 미사일방어체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쏜 지난 2월에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2016. 9. 8.

■ 9월말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추진...대북압박 모색(연합뉴스)

- 9월 하순 뉴욕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짐.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26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기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각국과 조율중임.
-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회담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구멍을 메우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채택 6개월여가 지난 안보리 결의(2270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 한미일, 정책차장급 화상회의...北미사일 정보공유 강화(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당국은 8일 정책차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함.
- 화상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미국 측은 크리스토퍼 존스톤 국방부 동아시아차장, 일본 측은 코지 카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각각 참가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국방부는 "미국은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에 의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3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일 3자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임.

2016. 9. 9.

■ 한미, 북핵 대응 '확장억제력' 강화 논의...12일 KIDD 회의(연합뉴스)

- 한미 국방부가 오는 12일 정례적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국방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힘.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 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됨.

■ <北 핵실험>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사드배치 서둘러야”(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함.
- 가드너 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북한의 무모한 지도자인 김정은은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했으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 우리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함.
-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진화하는 만큼 우리는 동맹과 함께 이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北 핵실험> **오바마 ‘북에 중대한 대가 확고부동한 동맹 방위공약 재확인’(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한국과 일본 정상들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동맹을 철통 방위하겠다’는 확고부동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을 동행 취재한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북한 핵시설 근처의 지진 활동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말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해 중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함.

■ **한미정상, 핵우산 확장억제 조치...안보리 새결의 강력압박(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기로 함.
- 라오스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15분간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인 오바마 대통령과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함.
- 청와대는 “양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청와대는 또한, “양 정상은 북한 핵실험 대응 및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한미외교장관, 추가 대북조치 강구...중리 동참 유도(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은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로 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15분간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고,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위급 및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이와 함께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국면에서 양국은 ‘완전한 의견 일치’(on the same page)를 보고 있음을 상호 확인함.

나. 한·중 관계

2016. 9. 3.

■ **朴대통령, 中 항저우 도착...한중회담 등 G20 외교 돌입(연합뉴스)**

-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두 번째 방문지인 중국 항저우(杭州)에 도착함.
- 박 대통령은 4~5일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주제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할 예정임.

-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 공조의 중요성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시진핑, 사드 염두 “냉전적 사고 포기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각국 안보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냉전적 사고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시 주석은 이날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루 전 열린 비즈니스 서밋(B20) 개막연설에서 특정 국가나 현안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포용, 화합을 강조한 안보관을 주창함.
- 시 주석은 “각국의 안보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고 어느 한 국가도 자기만 생각할 수 없으며 자기 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시기의 냉전적 사고는 방지돼야 한다”고 주장함.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염두에 둔 주장으로 해석됨.
- 시 주석은 이어 “앞으로 공동의 종합,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안보관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세계 및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이 평화와 안녕을 소중히 여기길 호소한다”고 말함.

2016. 9. 5.

■ 차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북핵공조·사드설득(연합뉴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함.
-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회담에 이어 5개월여 만이며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발표(7월8일) 이후로는 처음임.
- 박 대통령은 3세션에서는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G20의 적극적 행동을 주문하고 5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공유할 계획임.

■ 차대통령·시진핑, 한중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경제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함.

- 박 대통령은 이날 항저우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힘.
- 시 주석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함.

【한중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시 주석 = 대통령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저우에서 오셔서 G20 정상회의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저우는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저장성에서 투쟁을 하셨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님을 위하여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아들인 김신 장군님께서 1996년에 항저우 저장성 옆에 있는 하이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飲水思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 이익을 가진 만큼 우리가 지금 가진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며,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박 대통령님과 중-한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 대통령 = 항저우에 와보니까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시 주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임시정부가 이곳에서 활동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중국과의 오래전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중국이 독립 투쟁을 잘 도와주고 그런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경제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적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전 지구적 차원들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수록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정상회담에서 주석님과 제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양국이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뤘은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이번 도전을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최근의 양국 관계 상황과 또 향후 발전 방향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시진핑, 차대통령에 “美사드 한국배치 반대…핵심이익 존중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항저우(杭州)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함.
- 시 주석은 “이 문제(사드 배치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시진핑 ‘음수사원’ ‘구동존이’ 언급…한미일 공조에 견제구(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음수사원’(飲水思源)과 ‘구동존이’(求同存異)란 사자성어를 언급,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음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뜻으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시인 유신(庾信·513~581)이 패망한 조국 양(梁) 나라를 그리워하며 쓴 ‘징조곡’(徵調曲)이 출전임.
-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구동존이’의 의미와 관련, “한중간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공통점을 확대하지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통상 다른 나라와 관계를 잘 해보자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드와 연관지어 지나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임.

■ 靑 “한중 정상, 사드 진술한 첫 직접 대화가 성과”(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간의 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두 정상이 상호신뢰와 한중 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추세·대세리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솔하게 말씀 나누고 상호이해를 증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청와대는 평가함.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간접적 이야기는 있었지만 두 분이 이(사드) 문제를 가지고 직접 말씀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 후)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이 관계자는 사드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중간 포괄적 논의에 대해 “한미중간에 협의를 어느 차원에서 하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개념적 틀로 대화 채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함.

■ **유일호, 한중 사드 이견에도 경제문제는 감지 못해(연합뉴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오늘 회담에서 우리가 걱정하던 경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언급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함.
-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이 향후 한중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이미 브리핑했지만 (사드에 한중 정상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유 부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사드 문제를 갖고 했던 예상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서 “(중국의) 전면적인 조치 가능성은 낮고 비관세 (조치) 같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살펴봐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그렇게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함.
-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드가 한중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 “어떤 것도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밝힘.

2016. 9. 6.

■ **서울안보대화 내일 개막…중국 끝내 불참(연합뉴스)**

- 세계 각국의 고위 국방 당국자와 민간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2016 서울안보대화(SDD)가 7일 개막함.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9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SDD에서는 ‘복합 안보 위기:도전과 해법’이라는 대주제 아래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33개국의 고위 국방 당국자가 참석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5개 국제기구의 고위 인사도 참여함.
- 그러나 지금까지 4차례 회의에 빠짐없이 당국자를 파견했던 중국은 올해는 불참함. 이를 두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중국은 당초 장성급 인사를 파견하려 했다가 사드 문제가 불거지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짐.

2016. 9. 7.

■ **중국 ‘한미 정상 사드 결속’·‘서울안보대화 불참’ 연계 보도(연합뉴스)**

- 중국 언론이 한미 정상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과 중국의 서울안보대화(SSD) 불참을 연계해 보도하고 나섬.

- 7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은 왜 서울안보대화에 빠졌는가? 한국과 미국은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측이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면서 중국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내비침.
- 환구시보는 서울안보대화의 중국 불참을 언급한 뒤 곧바로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공동 발표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과 다자간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고 보도함.
- 다른 중국 언론들도 대부분 환구시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서울안보대화의 중국 불참과 한미 정상회담의 사드 결속을 연계하는 분위기임.

다. 한·일 관계

2016. 9. 3.

■ **日언론 “한일, 라오스서 정상회담 개최 최종 조율”(연합뉴스)**

- 한일 정부가 오는 7일 오후 라오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전함.
-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는 4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오는 7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함.
- 아사히신문은 “회담이 열리면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상황이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연대 강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2016. 9. 4.

■ **아베, 한중 정상과 미래지향적 논의 진전시키고 싶다(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이날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러 과제가 있는 만큼 (회담을 통해) 제대로 논의해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아베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 “법의 지배 및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으로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함.

2016. 9. 5.

■ **차대통령-아베,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일 긴밀 연대 확인(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과 접촉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함.

2016. 9. 6.

■ **차대통령, 중 리 이어 美·日과 정상회담...릴레이 4강 외교(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차례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사드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이어 전날에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 때문임.
- 박 대통령은 이어 7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핵 공조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됨.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정상 차원의 평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2016. 9. 7.

■ **교도통신, 한일중 정상회의 이르면 11월 하순 도쿄 개최 조율(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국, 중국 측과 조율을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교도는 북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개최 장소로는 도쿄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함.
- 한일중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은 일본으로, 개최가 이뤄지면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됨.

■ **한일 정상, 北도발에 한미일 3국 강력공조해 대응(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한일간 긴밀 협력은 물론 한미일 3국간 강력한 공조 체제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함.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비엔티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33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음.
- 청와대는 한일정상회담 결과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해 안보리 언론성명이 채택된 것처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공조해 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아베, 박대통령에 ‘소녀상 철거 포함’ 韓日합의 이행 희망표명(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7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관련, “합의에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다는 인식을 전하고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해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함.
- 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을 방문해달라고 아베 총리가 요청하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2016. 9. 8.

■ **외교부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 이해와 협조 확보해야”(연합뉴스)**

- 외교부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속에 추진 여부가 관심을 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임.
- 소녀상과 관련한 한일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임.

■ **일본, 소녀상 이전 요구 본격화하나..정부 '곤혹'(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소녀상 이전 요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소녀상의 문제도 포함해 계속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함.
-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 때문에 협력을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는 넘어왔다고 봐야한다”며 “소녀상 문제에서 보듯 아직 역사 문제가 남아 있는데, 북한 위협이 커지면 (한국의 대일 정책은 안보 협력과 역사인식 사이에서) 안보 협력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봄.

■ **日언론 “북한 위협 속에 한일관계 개선 흐름” 평가(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7일 열린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함.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쌍방이 미래 지향의 협력을 지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 등 현안이 남았지만, 관계 개선의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고 8일 보도함.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소녀상을 다루는 것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등 구체적인 안보 협력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한국 일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꺼내는 것을 자제하고 관계 개선 기초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분석함.

2016. 9. 9.

■ **한일외교장관, 北 핵실험에 ‘추가적 대북조치’ 강구하기로(연합뉴스)**

- 9일 전격 단행된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이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추가적인 대북조치’를 강구하기로 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약 20분간의 긴급 통화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함.
- 윤 장관은 이날 중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도 통화했으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임.

라. 한·러 관계

2016. 9. 4.

■ 사드 파국 피한 한러정상, 경협·북핵 연계에 주파수 맞아(연합뉴스)

- 국내 한-러시아 관계 전문가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연계하는 접근법에 두 정상의 주파수가 맞았다”고 평가함.
- 특히 러시아가 반대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큰 파열음을 내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양 정상의 실용적 접근에 따른 결과였다는 분석도 나옴.

■ 한·러 정상, 북핵 용인 안해…전략적 소통 강화(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북핵불용’의 기초를 재확인 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함.
- 두 정상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전체세션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음.
-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러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큰 안보 위협인 북핵·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푸틴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도 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요한 국제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우리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힘.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9. 3.

■ 미중 정상회담…오바마, 한반도문제 포함해 폭넓은 대화 원해(연합뉴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일 미중 정상은 서로 안보 현안과 경제 문제에 주안점을 두며 평행선을 달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항저우(杭州)에

- 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각종 현안에서 긴장이 고조된 양국 간 접점을 모색함.
-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및 인권 문제를 포함한 폭넓은 대화를 원했지만 시 주석은 원만한 G20 정상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간의 두 정상이 거둔 성과를 치하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를 강조함.

2016. 9. 4.

■ 미·중 정상, 사드·남중국해·인권 놓고 '정면충돌'(연합뉴스)

-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인권문제 등 양국 갈등현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펼치며 정면으로 충돌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항저우(杭州)에서 4시간 이상 마라톤 정상회담에서 갈등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
- 중국 외교부는 2천자 가까운 분량의 장문의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고 백악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함.

2016. 9. 5.

■ 中, 오바마 입국과정 '소동'에 美 관리·언론 비난(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항저우(杭州) 공항 입국과정에서 빚어진 소동과 관련, 미국 관리와 미국 언론의 무책임함을 비난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미국 측이 중국과 상의해 정한 협의를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미국 측에 사건 발생의 책임을 돌림.
- 화 대변인은 이어 “왜 유독 미국 측 실무자들과 유쾌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용기의 앞쪽 문이 아닌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은 중간 부분 문을 통해 내려온 것은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함.

2016. 9. 8.

■ 미·중, 이번엔 '남중국해 분쟁 교두보' 라오스에 구애 경쟁(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라오스를 상대로 구애 경쟁

- 에 나섰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함.
- 동남아의 빈국 라오스가 이처럼 미·중 양국의 구애 대상으로 부각한 배경에는 라오스의 전략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의 ‘의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미·중 양국은 그동안 중립에 서 온 라오스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경제 지원 공세에 맞서 미국은 일본 등과 연대해 라오스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라오스가 상당 기간 미·중·일 등 강대국들의 외교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中, 필리핀 인근 스카보러암초 인공섬 박차·美해군, 순찰 검토(연합뉴스)

-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준비 움직임에 중국이 우려하며 주변해역 순찰을 검토중임.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라오스 아세안 관련 회의 등이 마무리되자마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를 다시 강화하면서 미중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 보니 글레이저 CSIS 연구원은 “해상분쟁에 대한 법률집행 과정에서 중국은 정반대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상대국의 작은 해경선이나 어선을 추격하며 괴롭히거나 항행을 가로막고 들이박는 행동들을 보여왔다”고 말함.

■ 중국, 미국 거당 “남중국해 관련 주권 침해 반대”(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임.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미국과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중국의 영토 및 해양 주권을 쉽게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과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길 원한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6. 9. 8.

- **美日, 베트남-필리핀에 방위지원 ‘보따리’…中포위망 강화(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방위·경제 지원을 확대하며 중국 포위망 강화에 나섬.
 -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다투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교두보로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임.
 - 미국은 필리핀에 오는 12월 30인승 중고 군용기 2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밝히는 등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욕설 파문에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강화에 애쓰고 있음.

- **美日-中 정상 남중국해 충돌…“판결 이행하라”vs“제3자 빠져라”(연합뉴스)**

 - 미국·일본과 중국 정상이 남중국해를 놓고 충돌함. 7일 막 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의 의장 성명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판결을 거론하지 않아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들 강대국의 막판 힘겨루기가 벌어짐.
 -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필리핀명 바조데마 신록)를 매립, 인공섬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다소 고조되고 있음.
 - 스카보러 암초는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거점 가운데 하나인 필리핀 북부 수비크 만에 서 약 220km 떨어져 있음. 중국이 이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미국에 전략적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일 라오스 정상회담 불발…오바마 참석회의 지연 때문(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 지연으로 불발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가 지연되면서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고 보도함.
 -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바 있음.

2016. 9. 9.

■ <北 핵실험> 미일 정상 전화회담 “새로운 제재 포함 조치 필요”(연합뉴스)

- 미일 정상이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전화회담을 하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향후 대응에 대해 한국을 포함, 3개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미·러 관계

2016. 9. 5.

■ 오바마-푸틴 양자회담, 시리아사태 합의못해...해킹문제도 논의(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었음.
- 두 정상이 회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비공개 양자회담을 한 이후 9개월여 만임.
-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지난 7월 말 불거진 러시아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지도부 이메일 해킹 의혹까지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미국은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함.

2016. 9. 8.

■ 러 전투기 흑해상공 미정찰기에 3m 근접비행 ‘이슬이슬’(연합뉴스)

-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충돌 직전까지 근접 비행하는 위험한 장면이 또 연출됨.
- 미국 국방부는 7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흑해 공해상에서 정기적인 작전활동을 하던 미 해군 P-8A ‘포세이돈’ 정찰기에 러시아군의 수호 이(Su)-27 전투기 1대가 30피트(약 9m) 간격을 유지한 채 비행하다가 10피트(약 3m) 이내로까지 접근하는 안전하지 못한 요격 비행을 했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위험한 (전투기) 기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런 행동이 “국가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키우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오판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함.

라. 중·일 관계

2016. 9. 5.

■ 中견제속 중일정상회담 막판성사··센카쿠·남중국해 대립 불가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5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게 됨.
-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양국 정부는 막판까지 일정 조정에 난항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짐.
- 일본측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중국측은 막판까지 일본과 아베 총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정 확정을 뒤로 미뤘던 것으로 알려짐.
- 중국측은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 등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해역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여 회담 과정에서 중일 정상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2016. 9. 6.

■ 아베, ‘남중국해’ 국제법 따라야 vs 시진핑, 日 언행 신중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의 해양진출 등 현안에 대한 접점을 모색했지만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침.
- 두 정상은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됨. 지난해 4월에 이어 1년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중일 정상회담에서 사용한 ‘일본의 요청에 응했다(應約)’는 표현 대신 회견(會見·회동)이란 중립적인 문구를 사용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함.

■ 中과 대화 강조한 日, 필리핀엔 中견제용 대형순시선 제공(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해양진출을 가속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대형순시선 2척을 필리핀에

- 제공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라오스에서 열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외국에 제공하는 순시선으로는 최대급인 전장 90m의 대형순시선을 필리핀 연안 경비대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표명함.
 - 아베 총리는 전날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입장에서 곤란한 과제를 계속 관리하면서 안정적 우호 관계를 구축해 가고 싶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016. 9. 7.

■ 중국서 ‘中 해양진출 우려’ 아베 발언 보도 ‘깜깜’(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전한 일본 공영방송사 NHK의 해외방송 뉴스 프로그램이 7일 오후 중국에서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짐.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중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NHK 해외방송 뉴스가 방영되던 중 약 2분에 걸쳐 화면이 검게 처리됨.
- 교도는 “중국이 지난 5일 항저우(杭州)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 했다”며 “당국이 검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마. 중·러 관계

2016. 9. 4.

■ 시진핑·푸틴 ‘밀착’ 과시…군사 안보협력 강화하자(연합뉴스)

-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한 번 밀착 행보를 과시함.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협력 강화, 국제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함.
- 시 주석은 G20 회원국이 아니지만 자국이 초청한 차드,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 공들이기 행보도 펼침.

2016. 9. 6.

■ **中 훈춘~러 자루비노~속초 북방항로 재개 ‘청신호’(연합뉴스)**

- 수년간 운항이 끊겼던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강원도 속초항을 연결하는 동해 북방항로 재운항에 청신호가 켜짐.
- 6일 현지매체인 연변일보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힘입어 훈춘시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북방항로 가동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음.
- 동해 북방항로는 2000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1천163차례 운항하면서 승객 52만5천여 명, 화물컨테이너 5만4천여 개를 실어날랐으나 경영악화로 선박 운항을 중단함.

바. 일·러 관계

2016. 9. 3.

■ **아베, 러일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경제협력도 강화(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아베 총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연설을 통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제안한 에너지 개발 등 8개항의 경제협력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함.
- 아베 총리는 “러일은 경제면에서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며,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게이트 웨이(현관)”라며 이 지역에서 러일간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과 인적교류를 강화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푸틴 만난 아베, 북한 핵·미사일에 엄격 대응해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엄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전함.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것은 (중전 미사일 발사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협”이라고 비판함.

-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고 했고, 아베 총리는 “회의를 위한 회의는 의미가 없는 만큼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답함.

Ⅲ 북한인권

■ 개요

| 분류 | 일자 | |
|------------------------------------|--|--|
| 북한인권 국제동향 | 9.4 | 러 페테르부르크서 북한 노동자 2명, 괴한들 폭행으로 중상(연합뉴스) |
| | 9.5 | 美 국무부 “北, 강제수용소 방문조사 허용해야”(연합뉴스) |
| | 9.7 | 美 북한인권법 발효 환영…책임자 처벌 위해 韓과 지속 협력(연합뉴스) |
| | | 국제인권단체 ‘北 인권실태 고발’에 주목한 멕시코 언론(연합뉴스) |
| | | EU 노동조합 연합체 “北 강제노역 중단하라” 촉구(연합뉴스) |
| 프랑스 AFP통신 평양지국 개설…표현의 자유에 충실(연합뉴스) | | |
| 9.8 | ‘北주민에 바깥세상 알린다’…美, 통신수단 北투입방안 의회보고(연합뉴스) | |
| 북한인권 내부동향 | 9.5 | 北 선전매체들, 북한인권법 시행 비난(연합뉴스) |
| | 9.8 | 북, 국경연선 지역 여행금지 조치(자유아시아방송) |
| 북한인권 남한동향 | 9.4 | 北 인권법 오늘 발효…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추진(연합뉴스) |
| | 9.8 | 외교부, 北주민 대상 정보유입 확대에 한미 긴밀공조(연합뉴스) |
|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 9.6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산가족들 한적행사서 ‘눈시울’(연합뉴스) |
| | 9.7 | 1~8월 탈북민 15% 늘어…이민형 탈북 급증 추세(연합뉴스) |
| | | 탈북 수학영재, 여전히 홍콩 체류 중(연합뉴스) |
| 9.8 | 러시아 주제 北외교관 한국 망명은 실적압박 때문(연합뉴스) | |
| 대북지원 | 9.8 | UNFPA 대북지원 연장, UNDP는 잠정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9. 4.

■ 러 페테르부르크서 북한 노동자 2명, 괴한들 폭행으로 중상(연합뉴스)

-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 2명이 현지 괴한들로부터 흉기에 가슴을 찔리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 전함.
- 페테르부르크 인터넷 신문 '폰탄카루'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15분께 시내 데그타르나야 거리에서 현지인 괴한 여러 명이 46세와 56세인 북한인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함.
-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약 2천 명의 북한인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과 식품·방직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6. 9. 5.

■ 美 국무부 “北, 강제수용소 방문조사 허용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 강제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를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에 “북한 수용소의 구금 조건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이런 시설에 갇힌 어린이와 임산부 등 수감자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힘.
- 북한의 공식 수감시설인 교화소를 비롯한 강제수용소에는 현재 8~12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수감돼 고문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2016. 9. 7.

■ 美, 북한인권법 발효 환영...책임자 처벌 위해 韓과 지속 협력(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발효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4일 공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함.

- 히긴스 대변인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 법에 따라 설치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함.

■ 국제인권단체 ‘北 인권실태 고발’에 주목한 멕시코 언론(연합뉴스)

- 멕시코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한 국제 인권단체의 활동이 현지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음.
-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국제면에서 ‘탈북 북한주민, 멕시코에 도움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탈북 주민 김동남 씨의 사례를 보도했다고 40여 개 국제인권단체로 구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6일 밝힘.
- ICNK는 지난달 19일부터 8일간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3개국을 돌며 ‘북한 인권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독재체제 아래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삶을 영상으로 담은 러시아 영화감독 비탈리 만스키의 ‘태양 아래’(Under the Sun)를 중남미 지역 최초로 상영하기도 함.

■ EU 노동조합 연합체 “北 강제노역 중단하라” 촉구(연합뉴스)

- 유럽연합(EU) 내 노동조합 연합체인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European Trade Union)이 EU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인더스트리올은 “EU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역에 관한 일련의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점점 더 많은 조선, 섬유, 농업 등 분야의 제휴 노동조합들과 국가들, 언론기관으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데 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인더스트리올은 유럽 내 690만 명에 달하는 생산직, 광업과 에너지 분야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5월 설립됨.

■ 프랑스 AFP통신 평양지국 개설...표현의 자유에 충실(연합뉴스)

-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통신이 6일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했다고 7일 발표함.

- AFP는 평양지국에서 주로 사진과 영상을 취재해 세계 수천 개 언론과 정부 등 회원사에 배포함.
- 전날 평양에서 열린 개국식에 참석한 에마누엘 어그 AFP 회장은 “평양지국 개국으로 세계 150개국에 200개 지국을 보유한 AFP의 빈틈이 메워졌다”고 자평함.

2016. 9. 8.

■ **‘北주민에 바깥세상 알린다’…美, 통신수단 北투입방안 의회보고(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실태를 정조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세계 정보 확대 카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섬.
-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임.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의 명단이 담긴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제출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9. 5.

■ **北 선전매체들, 북한인권법 시행 비난(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일제히 기고문을 통해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비난하고 나섬.
-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5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최경철’이라는 인물의 기고문 형식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글을 실었음.
- 이 매체는 글에서 “박근혜패당의 북인권법 시행놀음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흠집을 내고 우리 체도를 흔들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대결광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함.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 있는 참다운 인권의 화원”이라고 주장함.

2016. 9. 8.

■ **북, 국경연선 지역 여행금지 조치(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선전매체들을 통해 국경연선 두만강 지역의 큰물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의 국경지역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뇌물을 주어도 통행증발급이 어렵게 되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이달 초부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국경지역으로의 여행 증명서(통행증) 발급이 중단됐다”며 “이미 발급된 여행증명서를 내 보여도 열차표를 떼어주지 않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태풍으로 철길이나 도로가 파괴돼 국경지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당국이 통행증발급을 거부해 갈 수 없다”며 “큰물 피해를 입은 양강도 혜산시도 철길은 무사해 열차운행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9. 4.

■ **北 인권법 오늘 발효...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추진(연합뉴스)**

- 지난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됨.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임.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016. 9. 8.

■ **외교부, 北주민 대상 정보유입 확대에 한미 긴밀공조(연합뉴스)**

-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 “북한은 폐쇄사회이기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한미는 이 문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대북 정보유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9. 6.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산가족들 한적행사서 '눈시울'(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는 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서울 지역 미상봉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열었음.
- 한국전쟁 등으로 가족과 헤어진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족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이날 행사에는 김성주 총재와 서울 동대문·성북구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60여 명이 참석함.
- 올해는 또한 한적이 북측에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의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함. 지난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당시 한적 총재는 '1천만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음.

2016. 9. 7.

■ 1~8월 탈북민 15% 늘어...‘이민형 탈북’ 급증 추세(연합뉴스)

- 올해 들어 국내로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늘어나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민형 탈북’이 급증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94명(잠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함.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임.
- 최근에는 해외과견자 등 북한 내 중산층 이상의 탈북이 급증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소가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은 올해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8월 말 현재 국내 거주 탈북민은 2만9천688명임.

■ 탈북 수학영재, 여전히 홍콩 체류 중(연합뉴스)

- 지난 7월 중순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학생이 여전히 홍콩에 체류하고 있다고 명보(明報)가 7일 보도함.
- 명보는 이 탈북 청년이 홍콩을 떠나 제3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홍콩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홍콩에 머문 지 이미 한 달 반이 됐다고 전함.
- 제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해 7월 6일부터 홍콩에 머물던 이 청년은 7월 19일 대표단과 함께 광저우(廣州)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달 16일 저녁 사라진 뒤 한국총영사관을 찾아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7월 말 보도함.

2016. 9. 8.

■ 러시아 주재 北외교관 한국 망명은 실적압박 때문(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지난 7월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현지 외교 소식통은 RF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러시아 당국도 이행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돈벌이, 즉 과업 수행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양의 대규모 행사나 건설로 인해 본국 송금 할당액은 급격히 늘어나 이를 채울 재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함.
- 이들의 탈북 시점은 7월 하순 망명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짐.

5. 대북지원

2016. 9. 8.

■ UNFPA 대북지원 연장, UNDP는 잠정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의 2016년 후반기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유엔인구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활동 보고와 유엔인구기금의 지원활동 연장 및 예산 승인이 논의됨.
- 운영이사회는 유엔인구기금이 신청한 총 1천150만 달러 예산의 ‘북한국가프로그램’

2017년~2021년 새 주기 활동 계획안을 심의하고 승인함.

- 7일 유엔인구기금에 이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4일~16일 열리는 자체 운영이사회 2016년 하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새 주기와 예산 신청에 대한 논의와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옴.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해 6월 이미 2016년 7월 1일~2018년 12월 31일 대북 식량 지원 활동 계획을 운영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음.
- 이처럼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유엔 기구들이 현 주기가 끝나기 전에 새 주기 신청을 사전에 준비해서 운영이사회의 검토, 승인을 받는 반면, 유엔개발계획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의 연장을 위한 새 주기 신청을 현재 진행중인 운영이사회의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 하지 않았음.
- 유엔 내부 소식통은 “유엔개발계획이 새 주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운영이사회 일부 이사국들이 사전에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했고, 새로운 주기로 최대 기한을 주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전함.